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편집부 정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체(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이하 이클레이¹⁾)가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88개국, 240개 도시, 190개 기관 및 시민 단체에서 약 1,500명이 참가한 이번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클레이의 8가지 주요 의제²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효과에 상응하는 혁신적인 정책 및 투자 해법, 지역 실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방안, 지방정부 정책과 비전 마련에 대한 기업, 중앙 정부, 연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클레이는 이번 행사에서 사흘 동안 개막식, 6개의 전체 회의, 4개의 특별주제회의, 4개의 주제별 분과회의, 도시의 자연 포럼, 시민사회 포럼, 현장 워크숍 등 수십 개의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글에서는 전체 회의 중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 교수의 기조연설, 도시정부의 파트너십 강화방안 그리고 이클레이의 전반적인 전략과 주요 결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2052-향후 40년의 세계전망

개막 총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 교수³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국가의 성장 전망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2052년의 암담한 미래를 전망하며 이러한 예측을 예방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랜더스 교수는 1970년대에 발간된 '성장의 한계'가 전 세계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한정되고 개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고 회자한다. 반면, 오늘날에는 구체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 기업, 정부, 세계 경제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과 국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해 온 방식에 대한 분석, 미래의 성장 전망 등을 통해 그는 2052년의 미래를 재전망하였다. 요컨대, 2050년대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규모는 현재의 2배로 증가하겠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1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는 1990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어 오늘날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현재 독일의 본(Bonn)에 본부를 두고 84개국 1,2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2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저탄소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녹색 도시경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

3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글로벌 비영리 연구기관인 로마클럽의 핵심 멤버이자 미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오늘날 '미래학 연구의 기본서'로 인식되는 '성장의 한계(Limit to Growth) 공동 저자이다. [김태훈, 2013]

지 위기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환경 파괴로 인한 손해와 재난, 빈곤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 한다.

랜더스 교수의 국가별 성장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라 한다. 반면, 중국은 공동의 목표와 강력한 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부를 축적할 것이며, 14개의 주요 신흥국 중 절반은 강력한 정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발전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한다. 기타 도시는 현재의 빈곤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연간 2% 정도로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인구, 경제, 환경,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대한 단계별 시나리오 예측 결과를 보면, 세계 인구는 80억 명까지 증가하다가 2050년부터는 감소하고, 세계 경제는 연평균 GDP가 3.3% 정도 성장하여 2052년에는 약 2배 증가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 자원 고갈,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소비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은 2040년에 절정에 달한 다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낮추지 못하여 결국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고 2080년에는 3도가 상승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후변화의 악화로 홍수, 가뭄, 태풍, 산불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 대하여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뜻밖에도 간단하다. 환경오염을 양산하는 노동력과 자본의 2%를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큰 난관은 비용증가이다. 높은 비용에 따른 저항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저항도 예상되며, 정치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지속가능성을 외치는 것에서 나아가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례로 국제 은행과 정부가 녹색성장 촉진 패키지

(green stimulus package)와 같이 자본 투자를 결정할 때,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랜더스 교수는 정책적 노력과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당부한다.

2. 도시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 도시정부-광역지자체-중앙정부 간 다층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없이는 국제 정책과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행동지역(R20)과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방안과 프로세스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데니스 코데르(Denis Coderre)시장은 많은 사람이 종종 중앙정부의 능력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각 층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몬트리올의 협력 사례를 제시하였다. 몬트리올은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MMC)라는 대도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도시계획과 환경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직은 몬트리올 광역시에 속해 있는 82개 지역이 모여 있는 조직으로 경제개발, 교통, 환경, 대도시 인프라 등의 사업과 자원조달을 기획하고 있다. MMC의 광역이용계획은 주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MMC, 시정부, 구단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각 층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 유지와 일관성 있는 계획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공동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MMC는 도시계획과 관리, 통합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관리, 자원개발 역량 향상 등의 공동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실행의 틀을 만든다. 코데르 시장은 메트로폴리탄 아고라, 퀘백 정책위원회와의 협력 체제를 사례로 들며, 원칙이나 목표보다는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의 하나로 수행하고 이해관계

자와의 논의를 통해 협업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도시권, 말레이시아 멜라카 지방, 인도 라쉬카트시, 남아프리카 지방정부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자카르타는 잦은 홍수와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지역과 협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멜라카주는 2010~2012년까지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멜라카 강을 개선한 사례도 가지고 있다. 또한 멜라카주는 유엔 녹색도시 시스템 도시환경협약(UEA)을 도입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이어지는 삼각형의 녹색도시 이니셔티브(IMGIT) 형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은행과 협력함으로써 녹색 도시 인덱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 라쉬카트시는 4~6월의 심각한 가뭄을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댐을 건설한 사례와 슬럼화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에게 권한을 위임받도록 협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 지방정부협회(SALGA)는 남아공 여러 지역의 실업률 해소와 빈곤해결을 위하여 국가와 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되 연관성을 명시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한 것, 필요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 그리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을 성공적인 협력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본 회의를 통해 도시정부와 중앙정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소통과 통합된 계획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설자들은 통합된 계획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서로 다른 규정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역할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모으고, 도시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과 기업해법의 결합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의 모델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도시-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2010~2014년까지 추진한 도시인프라이니셔티브(Urban Infrastructure Initiative, UII)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효과적인 협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이 공공조달 부문 참여 이전에 초기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립적 주최자와 함께 소통을 통해 사업적 이익에서 벗어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는 스웨덴의 말뫼, 핀란드의 투르크시, 콜롬비아 보고타시, 인도의 인도르(Indore)시, 독일 하노버시와의 협력사례가 소개되었다.

기업의 인프라 해법의 스마트 기후도시로 적용한 사례

말뫼는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31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구의 40%는 29세 미만이며 1~5살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말뫼는 지난 5년간 산업도시에서 지식기반 도시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과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포함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말뫼 부두 지역을 생태 다양성,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적정 가격의 아파트, 친환경적인 폐기물관리 전략을 가진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 재개발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인프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도시구조계획 내의 도시-기업 간 협력사례

핀란드 투르크시는 UII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부터 민간 기업과 함께 진행하였고, 이클레이도 이에 기여한 바 있다.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를 비롯하여 지역 기반의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도시계획과 인프라 구축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 때 기업과 협력기관들은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대학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모아 지속 가능한 참여와 균형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UI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시행정부와 기업,

UII의 전문가들은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이슈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제안과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임팩트가 가장 큰 에너지, 교통, 물류 부문을 핵심 과제로 도출하면서 지멘스와 투르쿠시는 3년짜리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캐슬타운과 스칸시 지역에서 몇몇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UII 플랫폼 내에서 인프라 구축을 지멘스와 먼저 협력하고 추가로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캐슬타운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도시를 만들고자 석탄을 기반으로 한 지역난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스칸시 지역은 열 교환 기술을 적용하여 중앙 지역난방시스템의 열손실을 개선하였다. 또한 태양열, 지열, 히트 펌프를 도입하고 20개 기업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이 시범 지역들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도시의 운영을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공동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은 긍정적인 변화를 내고 있어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례

창원시는 기존의 전력망에 통신정보기술을 접목해 소비자가 전력소비량에 대해 정보를 얻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전력소모,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전송, 전력사용 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1970년대부터 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메카로 첨단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선박, 기계 부문 대기업과 4,000여 개의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정책이 절실하였는데 한국전기연구원 등 전기 부문 제조업체가 있어 기술 활용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스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5~2017년까지 240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될 예정인 본 사업을 통해 SK 전기차 사업, LG 에어컨 구축사업, 에너지 설비 교체, 유지 및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제조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회의 주최자들은 기업도 도시의 중요한 주체이자 도시를 소비하는 고객으로서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공동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 도시로 대규모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민관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역량에 관심을 뒤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혁신적 기업도 대표로 함께 참여하는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할 것이라 하였다.

■ 도시와 연구기관 간의 파트너십

도시 정부와 연구기관 간의 협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상호 협력의 의지에 비해 실제 협력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서울연구원과 시몬 프레이저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세션에서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도시와 협업하고 도시의 정책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정부와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정부의 혁신적 정책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메가시티 싱크탱크협의체(MeTTA)는 세계의 도시 수준 연구 기관 간의 협력 체계로서 각 기관의 역량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다. 미국 기반의 글로벌 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개도국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WRI는 지방 정부와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터키 등의 도시 및 국가 지도자와 협력하여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에 기반을 둔 세계환경전략(GES)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 거버넌스만이 도시기반시설과 혁신적인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스마트 시티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분야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CLC)는 시

가포르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국제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월드시티서밋(World Cities Summit)과 메가시티싱크탱크(MeTTA) 플랫폼의 기능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핀란드 헬싱키 부시장은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캐나다 시몬 프래저 대학교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도시 연구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 동향과 목표, 그리고 해법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왜 도시가 지속가능성 의제를 이끄는 중요한 국제적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클레이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David Cadman)의 연설은 도시가 국제적인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정당성과 의무를 잘 제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는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사는 도시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전 지구에 도시 행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도시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하며 개발과 소비 중심의 도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러한 경험을 전 세계 도시와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클레이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기후변화협정을 맺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도시들이 각국의 정부를 향해 ‘이제는 더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도시들이 각 정부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고 다른 도시들의 참여를 촉구하길 회원 도시 및 기관들에 부탁하였다.

■ 서울 선언문, 시장 협약, 그리고 서울 액션플랜

개막총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여러 도시의 공감대를 얻으며 도시들의 미래 정책 방향에 기초적인 실천적 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선언문은 ‘지속가능성 발전의 원칙’으로 9가지의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각 실천 전략으로는 △저탄소도시 및 온실가스 감축,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 효율적이며 생산적 도시, △생태교통 도시, △스마트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 도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공공구매,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협력이 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도시 대표들은 각 도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전략과 수행 계획 및 서울선언문 이행 계획을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시장이자 새로이 선출된 이클레이 부집행위원장인 제인스 누말로(James Nxumalo)는 서울선언문이 지난 25년 동안 ICLEI가 진행한 것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의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서울선언문에 회복력 관련 행동을 포함한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더반시의 정책을 예로 들며 회복력 측면에서 도시간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독일 프라이버그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환경, 경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다세대에 걸친 재정 정책을 통해 이행할 때에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며, 프라이버그시는 지속가능성을 수평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여 통합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60개 지역의 지속가능성 목표과 실행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호주 준잘루프 시장, 부탄 팀푸시 시장, 핀란드 헬싱키 부시장, 중국 베이징·동관시·귀양시 시장, 말리이시아 피넵 시장, 수원시 시장 등 20여 명의 시장과 도시 대표들이 각 도시의 정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204개 도시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시장 협약도 이번 총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클레이의 집행위원단과 주요기관들은 세계도시시장포럼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시장협약 연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9월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시장 협약은 ICLEI, C40 도시기

후리더십그룹,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3개의 세계도시네트워크가 기술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담은 합의문으로, 매년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계획,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를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서울액션플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통합적 지역 실천활동’ 회의에서는 포스트-2015 개발의제를 위한 세계지방정부 T/F의 주요 논의사항들이 공론화되었다. Rio-20에서 나온 지속가능한 개발 협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 9월에 열리는 UN 포스트-2015 정상회의는 향후 20년간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사무총장 이보 드 보어(Yvo de Boer)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금융기관들의 등장은 큰 기회로서 도시들이 이를 잘 인지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유해한 정부의 정책은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존 클라스(Joan Clos)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은 포스트-2015 발전의제 중 지속가능한 도시부문에 대하여 도시화는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결과물로서 활용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관계임을 인지하여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와 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세계도시데이터협의회(World Council on City Data) 회장 패트리시아 맥칼니(Patricia McCarney)는 도시들에 관한 ISO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과 과정을 통해 도시가 빅데이터를 정책과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지방 정부들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데이터가 전 세계에 공유되어 협력적으

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UCLG 사무총장 조셉 로이그(Josep Roig)는 포스트-2015와 해비타트Ⅲ의 아젠다 결정에 대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경과를 설명하였고, 아를레이 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은 UCLG의 활동이 지방정부가 국제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폐회식에서는 각 도시의 실천 계획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도시네트워크 연대 강화, △시장협약의 이행 및 확대를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 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담은 서울액션플랜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서울선언문과 서울액션플랜, 시장협약 참여 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은 2015년 12월에 신기후체제를 논의하는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